

# '21세기 두뇌한국' 청사진 나왔다

글 \_ 송찬영 한국대학신문 기자 ssanun@zaigen.co.kr

21세기를 이끌어갈 '두뇌한국'의 청사진, 이른바 '포스트 BK21' 프로젝트가 실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와 BK21 기획자문위원회는 10월 31일 (월) 서울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사업공청회를 열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사업은 12월 대통령보고를 거쳐 공고되며, 내년 3월부터 사업단을 선정, 정식 출발한다.

이날 발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명칭은 '2단계 BK21 사업'이다. 이전사업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질적인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 사업비로 연간 3천억 원씩, 7년간 투입

사업규모는 1단계보다 연간 1천억 원 늘었다.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년간 연 3천억 원씩 총 2조1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는 전체 86%로

각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온 사람들이 '2단계 BK21 사업' 사업소개를 듣고 있다.



연간 약 2천600억 원이 지원된다. 총 금액에서는 늘어났지만, 사업 비율면에서는 1단계 사업보다 4% 줄어들었다.

늘어난 금액은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과 사업단 수를 늘리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대학연구원들의 기본 생활을 위해 대폭 상향시켜야 하지만 이 경우 사업단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교육부는 고민중이다. 하지만 현재 잠정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석·박사과정은 1단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박사과정은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박사후과정생은 12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계약교수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목표 역시 구체화했다. 다소 추상적이던 1차 때와는 달리 세계 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과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고급 연구 인력을 연간 2만 명 양성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사업 지원분야도 시대 흐름에 맞게 체계화·세분화했으며, 국부를 창출할 사업성이 강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1단계에서는 세부분야 구분 없이 정보기술, 생명, 기계, 화학 등 9개 지원분야를 열거했지만, 2단계에서는 기초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응용과학(정보기술,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응용생명), 학제간 융합분야(에너지, 환경, NT, BIT, NIT, SI 등)로 구분했다.

사업 분야에서는 1단계의 지역대학육성사업과 대학원전용시설사업을 폐지하고, 지역우수대학원육성과 고급전문서비스인력양성분야를 신설했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역차별이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열악한 지역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산학협력 강화, 평가체제 개편

이번 사업은 분야별 대학원의 특성화 유도, 산학협력의 활성화, 평가 및 관리체제의 혁신을 3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설정했다. 또 1단계 사업의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 인력양성사업으로의 성격 강화 및 국가 R&D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원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분야 특성화를 위한 평가지표가 확대된다. 사업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집중도, 학부·대학원간 비중 등을 중점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 제도개혁 및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1차 때와 같이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수업적평가제, 교원확보율 등 연구중심대



과학기술분야 분과위원장이 '2단계 BK21 사업'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하고 있다.

학 기반 구축은 기본사항이다.

이번 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산학협력 강화이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산학관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기술이전, 산학공동연구 등 산학관련 지표 평가비중을 1단계 5%에서 2단계에서는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사업단 구성시 우대하기로 했다.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기업과 기술개발 공동연구,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기업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사업단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상당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가령 기업이 박사학위를 가진 직원을 대학사업단에 계약교수로 파견해 공동연구를 한다면, 연간 250만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 때 자주 지적됐던 평가문제도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설립되는 고등교육평가원 산하에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평가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또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학 자체평가 시스템을 넣어, 대학 내부 감시를 보다 강화토록 했다. 1차의 경우 한번에 모든 사업단을 선정했지만, 2차 사업에서는 단계별 선정과 일괄 선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연차평가를 통해 분야별 하위 20% 사업단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시행 3년 후인 2009년 누적평가를 통해 하위사업단을 탈락시키고 신규사업단을 진입

시킨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인력사업이지만 정통부, 산자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R&D 사업 등과 연계될 전망이다.

특히 고급인력양성 취지에 걸맞게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긴밀히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우수대학원육성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가 추진중인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미 부품소재 산업 등 전략적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연계한 사업단을 우대할 방침이며,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서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 대학원 특성화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지역대학원 육성사업의 경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는 병역특례도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부처간 조정 어느 때보다 중요**

이렇듯 이번 2단계 BK 21사업은 1단계 사업의 장점을 승계하면서 당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방만한 사업단 운영 등의 문제점을

**BK21 기획단장(엄상현)과의 1문 1답**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와 기업 참여 독려할 것”**



☞ **사업의 구체적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청회 때 제시한대로 12월 말 사업공고, 2006년 3월말 사업단 선정일정으로 진행된다. 최종 공고를 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의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예산이 1차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사업단을 늘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단계 예산이 3천억 원으로 산출된 것은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신산업분야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

단의 수와 지원 인력은 1단계에 비해 크게 증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사업선정시 누리사업 등 기타 사업과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BK21사업과 동시에 참여(예정)하고 있는 누리 등 교육연구 사업은 BK21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업단 평가 점수에서 가감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단은 다른 사업들 간의 연계성 및 시행상의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서울대의 경우 관**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특히 과기부의 연구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인해 대학들은 또다시 기본 학문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고급인력양성사업은 교육부 이외에도 정통부나 산자부에서 별도 추진중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학원 조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간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또 다른 정책적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과연 선택과 집중이 균형발전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연구 중심대학 구축의지는 분산되고 제도개혁 또한 퇴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지역 대학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다른 사업과 중복투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누리사업 선정대학을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거부한 서울대에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얼마나 실현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1단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사업단을 다른 이유로 배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부가 공언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임교원확보율과 지방대 자교 출신자비율 등 대학의 현실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지원기준과 SCI논문예 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논문을 평가절하한 것 등도 최종사업에서는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향후 결실을 맺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 기술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라며, 차제에 대학 연구실보안도 평가 영역에 넣자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글쓴이는 교수신문 기자, '헬스엔케어' 편집장 등을 지냈다.

### 련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없게 되나

교육부가 그 동안 의학 및 치의학 인력양성의 경우 학사조직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할 것을 대학에 권장해 왔다. 대학이 BK21사업의 의학 및 치의학 사업단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문대학원 체제를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것이다.

**☞ 전임교원확보율에 대해 지방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현실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

전임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다. 대학은 책임 있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교수확보율 증대 등 교육연구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의 참여는 부족한 것 같다.**

기업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다거나, 대학이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기업에 협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대학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이 본질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기는 하나 대학의 이러한 기능이 학문의 실용적인 측면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기능 전환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는 BK21사업을 통해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